



## 전기제품의 안전성 제고

(주)텔레넷 대표이사 전관재

031) 594-4881 ~2 ckj@telenet21.co.kr

우리나라의 전기전자산업은 지난 과거 30년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리하여 그 결과 우리 산업의 생산 및 수출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진국 도약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상위그룹에 속해 있다. 이러한 발전은 그동안 전기전자제품제조업체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해서 안주할 수는 없다. 작금의 세계경제는 국경없는 하나의 열린 시장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어 국가간 그리고 기업간의 경쟁이 보다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전자제품 시장만 보더라도 지난해 10월현재 전기용품 안전인증이 부여된 5,000여 업체에 18,600개 모델중 수입제품 비율이 40%를 넘어섰다. 또한 부분품으로 수입되어 국내에서 단순 조립되어 시판되는 제품까지 포함하면 50%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 국산 전기전자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또한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

품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해 모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시키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생산된 제품은 해외에 수출하여도 안전성에 관한 한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 경쟁속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저가경쟁으로 인한 제품의 안전성의 결여와 품질저하, 그리고 불법·불량제품의 유통 문제이다.

최근에 분석된 자료를 종합해 보면 안전성이 기준에 미달되는 불량제품과 법규마저 준수하지 않은 불법제품이 안타깝게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와 전기제품제조업체가 공동으로 합심하여 불법·불량제품의 시중유통이 단시일내에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조업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충실한 안전교육을 병행시행하여 불량제품이 생산·수입·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합동으로 협력하여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불량제품의 시중유통을 근절하기 위

해서는 사후관리를 지금보다는 더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 금년부터는 안전인증을 취득한 전기제품에 대하여는 제조현장과 시장에 유통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철저한 시판품조사와 엄격한 제품시험을 실시할 것이라는 반가운 보도가 있었다. 그래서 제품의 적합성 여부의 시험에서 불합격될 경우 그 제품의 품질이 적합제품으로 개선될 때까지 계속 보완하고 시험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시험제품이 안전기준에 합격하는 양질의 제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의 주기를 늦추거나 일정기간 동안은 사후관리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PL Act)이 발효되어 제품에 대한 업체의 부담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분쟁해결을 용이하게 돕기 위해 제조물책임법 실시와 더불어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에서도 ‘전기제품 PL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결합있는 전기제품으로 인한 사고의 분쟁조정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시의에 맞는 적절한 조치라고 하겠다. 보다 공정하고, 또 신속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지도록 PL상담센터의 운영을 꾸준히 진전시켜 많은 피해소비자와 고통받는 중소기업체들이 법적소송으로 이어지는 지리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억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지붕없는 한 울타리내에서의 무한경쟁시대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속에 놓여 있다. 국제시장에서 이제 경쟁상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더 굵은 땀을 흘리고 잘해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기업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는 제도적 요소들을 찾아서 과감히 제거하고 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 향상을 위한 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전기용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전기용품제조업체는 계속 매진해야 한다.

